

식민지 근대화의 실상

“반일 종족주의” 비판

식민지 근대화의 실상

“반일 종족주의” 비판

초판 1쇄 발행 2025년 4월 15일

지은이 전용덕

펴낸곳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주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도서주문 02-889-4424, 02-880-7995

홈페이지 www.snupress.com

페이스북 @snupress1947

인스타그램 @snupress

이메일 snubook@snu.ac.kr

출판등록 제15-3호

ISBN 978-89-521-3930-6 03910

© 전용덕, 2025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식민지 근대화의 실상

"반일 종족주의" 비판

전용덕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문

이 책은 이영훈 등이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등에서 제기한 역사 이해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 책들이 출간된 이후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한 책, 논문, 짧은 글 등이 상당수 발표되었지만, 저자가 보기에는 그것들에도 경제사에 국한할 때, 오류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첫 번째 동기입니다.

임종국은 『일본군의 조선침략사II』의 서론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총독부를 포함한 수많은 일본인들에 의해] 위조·분식된 선정의 기록만이 남고, 이리하여 후손들이 왈, 총독부가 그토록 선정을 했는데 그 미친(?) 조상들이 왜 독립운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게 된다면, 이 나라의 국기國基는 대체 무엇이 되는 것인가?” 임종국의 이 말은 마치 2020년 즈음에 출간되었던 『반일 종족주의』를 30년도 더 이전에 이미 예견한 것 같아서 저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두 번째 동기입니다.

일본의 소위 ‘우익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한반도에서 행한 선전·선동을 끝이곧대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선전·선동이 당시 한반도 한인들의 행동을 조작하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들의 그런 주장이 지금의 다수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의 사과를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일 것이라고 저자는 추

론합니다. 일본 우익들이 믿는 것이 거짓말임을 증명하는 일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세 번째 동기입니다.

선전·선동, 공포에 의한 지배, 감시·감독의 일상화 등은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선전·선동이 그렇습니다. 선전·선동의 예는 김정은의 북한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실내 경기장에 모여 김정은의 연설을 듣고 거의 광적으로 박수를 치거나 조화를 흔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도 없는 박수를 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각 크고 작은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정은과 그 주변 세력은 그때그때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선전·선동을 하고 그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즉각 여러 가지 처벌이 내려졌을 것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공개 총살했습니다. 공포에 의한 지배를 감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은 가족 간에도 자신의 속마음을 토로할 수 없을 정도로 감시·감독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군국일본지배기에는 그 당시 어용언론이 그런 선전·선동에 앞장섰습니다. 김정은의 북한과 군국일본지배기 한반도, 둘 중에서 어느 쪽이 선전·선동 등이 심했는가는 연구가 필요하지만 후자를 이해하는 데 전자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10~1945년의 식민 지배 기간을 연구하는 역사가가 자주 범하는 잘못은 그 시기 일본제국 또는 조선총독부의 목적 또는 그와 관련된 선전·선동, 공포에 의한 지배, 감시·감독, 구전 통신의 억압과 처벌 등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제는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했는데 그런 행동은 궁극적으로는 식민 지배를 어떻게 잘 유지하여 지배 비용은 적게 하고 지배에 따르는 이득을 어떻게 그리

고 얼마나 최대한 채길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한 것입니다. 이때 역사가는 식민 지배자들의 목적, 동기, 가치 판단, 이념 등을 면밀히 고찰해 역사적 실상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영훈은 민간 매춘업자와 민간 매춘부만이 그 당시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일본군에 의해 지휘·감독을 받은 일본군 위안소와 일본군 위안부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다른 많은 역사가가 이영훈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저자는 판단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식민지 근대화론에서도 경제 문제가 아닌 것도 최대한 제외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 지배한 것이지 통치나 정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국어사전에는 통치, 정치 등에도 지배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지배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한반도 한인들은 일본제국에 지배당한 것입니다. 국가가 멸망한 상황에서 한국, 한국인이라는 개념도 전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한반도, 한인이라는 개념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병합이라는 개념도 틀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는 일본에 병합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한반도를 병합한 것이 아니라 무력을 포함한 여러 방법으로 지배한 것입니다. 일본 국가를 지칭할 때 일본제국 또는 일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념적 지향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군국주의 국가 일본 또는 줄여서 군국일본이 더 타당하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강점이라는 개념보다는 지배라는 개념이 더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일제 강점기라는 개념보다는 군국일본지배기, 식민지기 등과 같

은 개념을 사용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책이 군국일본이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한반도를 지배했는지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이영훈 등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그에 대해 비판한 연구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장의 요약을 서문 다음에 붙여 두었습니다.

대구 신매동에서
전용덕 쓰다

차례

서문	4
서장	11

1부

수탈 대 수출

1장 수탈 대 자율거래	37
2장 수출 대 수탈	49
3장 식민지 한반도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아니었다	66

2부

선전·선동, 공포에 의한 지배, 감시·감독의 일상화, 구전 통신

1장 선전·선동	83
2장 공포에 의한 지배와 감시·감독의 일상화 그리고 구전 ^{口傳} 통신	100

3부

전시동원

1장 노동력 동원의 강제성과 모집, 관알선 등의 강제성	115
2장 징용은 노예노동	126
3장 징용에서의 민족 간 임금차별	139
4장 징용이 초래한 각종 부작용	171
5장 학도지원병제	176
6장 육군특별지원병제와 징병제	192

4부

토지·임야조사사업과 소작제

- | | | |
|----|---------------------------------|-----|
| 1장 | 군국일본의 토지 수탈: 국망國亡했는데 국유는 무엇인가요? | 201 |
| 2장 | 소작제: 농지 임대차 시장에서의 생산구조 | 211 |

5부

식민지 근대화론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 또는 정책

- | | | |
|----|------------------------------------|-----|
| 1장 | 근대화의 한반도 내 기원 | 237 |
| 2장 | 1920년대 군국일본의 식민지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 또는 정책 | 241 |
| 3장 | 21세기 한국 역사가들의 식민지 근대화론 | 286 |
| 4장 | 한반도 한인 빈곤의 근본 원인 | 343 |
| 5장 | 문명 교체론 관점에서 본 식민지 근대화론 | 387 |

주 401

참고문헌 410

찾아보기 418

| 일러두기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가 삽입한 내용입니다.

서장



이영훈 교수¹(이하 존칭 생략)는 일제의 조선 지배 목적이 ‘영구병합’이라는 고차원적인 수탈이기 때문에 토지나 쌀의 무상 약탈 같은 저차원적인 수탈 방법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영훈 교수는 맨슈어 올슨이 분류한 도적의 유형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슨은 도적을 모든 것을 약탈하고 황폐화한 후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약탈형’ 도적과 그 지역을 계속 지배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정주형’ 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영훈은 일제가 정주형 도적이었기 때문에, 약탈형 도적으로 가정하고 만들어 낸 기존의 이야기들이 허구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일제가 한 푼도 안 주고 쌀을 강탈해 갔다거나 일본 헌병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자를 끌고 가 위안부로 삼았다거나 하는 행위는 약탈형 도적이 하는 짓이지 정주형 도적이 하는 짓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영훈이 놓친 것은, 도적의 유형과 관련이 없이, 도적은 도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조선 총독과 같은 고위직 일본인들은 자신들

은 정주형 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나 법령의 최일선 집행자인 일본 헌병, 면서기 등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목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약탈형 도적처럼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도적은 정주형과 약탈형을 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주형 도적이면서 일부 지역이나 정책에서는 약탈형 도적이 하는 행동을 했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주형만 가정하면 약탈형 도적 행위를 간과할 수 있고 약탈형만 가정하면 정주형 도적 행위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영훈은 도적의 형태를 전제한 것처럼 보입니다. 일제가 어떤 때 정주형 도적이었고 어떤 때 약탈형 도적인가는 ‘선택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실증의’ 문제로 보입니다. 즉 역사가에게 부여된 임무는 약탈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지 도적의 형태가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제는 동화주의, 즉 ‘조선의 시코쿠·큐슈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김낙년²은 그런 목표가 정치 면에서는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는 구호에 불과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경제 면에서는 두 지역이 통합되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고 주장합니다. 경제 면에서는 일본의 제도를 거의 그대로 조선에 이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일제가 조선을 시코쿠나 큐슈로 만들고자 했다면 엔화와 별도의 화폐인 원화를 사용하도록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한반도 한인의 일본 이주를 막지도 않았을 것이며, 제도적으로 한인을 차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즉 김낙년의 주장과 달리 일제는 한반도 경제를 일본 경제에 ‘종속’된 것으로 취급하면서 해방될 때까지 철저히 ‘도적’으로서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반도를 영구적인 식민지로 만들려 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약탈형 도적이었던 때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조선과 일본의 시장이 완전히 통합되었다’는 김낙년의 주장³을 더 자세히 봅니다. 두 시장에서 단일 통화를 사용하지 않았음은 앞에서 지적했습니다. 관세가 없었지만, 일제는 국내의 사정에 따라 쌀의 일본 수출을 허용하기도 하고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1925년도항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해방 직전까지 한반도 한인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자리를 찾는 것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인이 한반도로 이주하거나 한반도에서 기업을 설립하는 것에는 제한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배 목적에 따라 한반도에서 일본 기업의 설립을 제한한 경우가 없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조선회사령은 1920년 폐지). 일본인에게는 한반도에서 일하거나 사업할 자유를 거의 무제한으로 준 반면, 한반도 한인에게는 일본에서 일하거나 사업할 자유를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일본으로 이주한 한인에게는 1923년 관동대지진 한인 대학살에서 보듯이 멸시와 차별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한인이 한반도에서 일하거나 사업하는 경우에도 많은 제한과 통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장뿐만 아니라 노동시장마저도 통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선과 일본의 시장이 완전히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정책은 일본 본토와 한반도에 사는 일본인을 위한 차별적 식민지 정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경제를 일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종속’ 경제로 만든 것입니다. 일제는 일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한인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반도 시장에서의 쌀값과 한인들의 복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본에서 쌀이 모자라면 일본으로 쌀을 수출했고, 일본에서 쌀이 남아돌면 일본으로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일제가 한반도 경제를 종속 경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많은 시장에서도 일제는 한반도 경제를 중속 경제로 취급했습니다.

3·1운동 이후 한반도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명분으로 일제가 수립한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한반도 농민은 쌀을 더 많이 생산했지만 1926년 무렵부터 오히려 농민의 경제적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제는 산업화의 진전으로 일본에서 인력이 모자랐을 때도 한반도 한인이 일본으로 이주하는 것을 최대한 저지했지만, 2차 세계대전으로 산업현장에서 인력이 극심하게 부족해지고 확대된 전선에서 전쟁을 치를 군인이 부족해지자 모집, 관알선, 징용, 징병 등의 방법으로 한반도 한인을 일본, 만주, 동남아시아, 한반도 일부 지역 등으로 강제 동원했습니다. 이때 조선총독부는 선전·선동, 공포에 의한 지배, 감시·감독의 철저, 구전 통신의 억압과 규제 등을 강화하여 한반도 한인들의 여론과 행동을 조작했습니다.

조선총독부의 한반도 경제정책에서도 1937년 중일전쟁으로 전쟁 사회주의에 돌입하기 전까지 산미증식계획 등 철저한 농업 중심 정책을 취해 한인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 즉 공업화를 막았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한반도 북부와 경인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광공업의 비중을 상당히 높였으나 전쟁물자 생산을 위한 병참기지 건설이 목표였고 그곳에서 생산한 물자 대부분이 전쟁터에서 소모되었기 때문에 이는 한반도 한인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적었습니다.

1937년 이후 공업화를 일부 역사가들은 ‘군수공업화’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Austrian Economics은 전쟁 수행 목적의 공업화를 ‘전쟁 사회주의war socialism’ 또는 ‘전쟁 경제war economy’로 개념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위한 항공기공업은 생산이 증가할수록 부가가치 증가가 일어나지만, 엔진과 같은 중요

부품은 일본에서 수입해서 조립했을 뿐만 아니라 전투용 항공기는 민간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산 증가는 한인의 물질적 삶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쟁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특성인 지속 불가능성을 지녔지만, 전쟁이라는 특수성, 즉 자원의 소모와 낭비가 보통 사회주의보다 극심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도 소비자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특수성을 지녔습니다. 1939년 이후 ‘군수회사법’을 포함한 일련의 규정이나 법이 시행되면서 자원이 ‘군수회사’로 지정된 회사에만 배분되었고 자원의 소모와 낭비가 극심해졌기 때문에 저자는 1941년 이후를 전쟁 사회주의 2기, 1937~1940년을 전쟁 사회주의 1기로 규정합니다. 그렇게 구분한 것은 2기가 1기보다 더 소모적이고 파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이유로 한인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퇴보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한반도에서 한인과 일본인들을 철저하게 차별했습니다. 교육 기회에서의 차별, 교육을 마친 사람들의 고용, 임금, 작업 배치, 승진 기회,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이 있었습니다. 대출금리에서의 차별, 관공사 입찰에서의 차별, 대규모 회사의 설립과 주식회사 상장에서의 차별도 컸습니다. 제도적으로 차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영역에서도 실행 과정에서 수많은 차별이 실재했습니다.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일본인을 우대하라는 제도가 명시적으로 존재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는 경우에도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독하고 승진시키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실행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차별에는 일본인들의 메이지 유신 성공으로 인한 대韓(對韓)아시아인 멸시가 있었습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를 비판적으로 평가했던 일본의 일부 지식인들은 그 당시에 이미 그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비록 부분적이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영훈 등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에 관해 논쟁할 때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첫째는 근대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근대화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근대식 건물, 전기, 도로, 철도, 병원, 학교 등과 같은 근대 문물이 들어온 것을 근대화라고 정의할 것인가, 민법이나 형법 등의 법률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 교육제도, 사회복지제도 같은 근대적인 제도가 도입된 것을 근대화라고 정의할 것인가, 자유와 평등 같은 근대적인 사상이 실현되는 것을 근대화로 정의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을 근대화로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식민지 한반도가 근대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영훈 등은 근대화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식민지가 근대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대 문물이 한반도로 들어온 것을 근대화로 정의한다면 식민지가 근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방법으로 근대화를 정의한다면 식민지기에 한반도가 근대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제가 자본주의와 민주정을 도입하지 않고 간섭주의와 전쟁 사회주의로 한반도를 지배하여 한반도 한인의 자유를 억압했고, 평등보다는 한인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제가 식민지를 ‘근대화했다’는 것과 군국일본지배기에 식민지였던 한반도가 ‘근대화되었다’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군국일본지배기에 근대식 건물, 전기, 도로, 철도, 병원, 학교 등이 건설되었고, 근대식 의료기술이 도입되어 영아 사망률이 낮아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근대 문물의 도입을 근대화로 본다면 군국일본지배기에 식민지 한반도가 근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지배하지 않았더라도 근대 문물은 한반도에 도입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일제가 식민지 한반도를 근대화했다고 보기는 어

렵습니다. 사상, 제도 등과 달리 문물은 비교적 쉽게 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880년에 에디슨이 신식 발전기와 전등 부속품을 발명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발전설비는 1884~1885년 무렵 도입되었고 1887년경에 점등되었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수준이 매우 낮았던 시기에 4~5년이라는 기간은 아주 짧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의 답례사 겸 통상사절단(전권대사 민영익, 부사 홍영식)이 1883년 6월에 미국으로 떠나 유럽을 돌아 귀국했는데 이때 이들이 백열등을 보고 주문 상담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한반도에 발전설비를 도입하고 점등할 수 있었습니다. 즉 조선에서의 발전설비 도입과 점등이 미국과 시간적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제가 전기공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토목공학자와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을 일찍이 허용했다면, 또는 서양인 공학자와 기술자의 유입을 허용했다면, 그리고 민간의 저축이 충분했다면 1930년대 수력발전을 할 수 있는 한인 소유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업과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는 그 세 가지를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성제대는 1926년에 법문과와 의과만으로 개교했지만 1937년 전쟁으로 일본인이공학부생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이공학부를 1938년에 처음 개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방해 때문에 한반도가 발전과 전기이용에 관해 미국보다 50년 가까이 뒤처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기와 같은 서양문명의 이기를 자력으로 생산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력 생산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일본이 한반도 경제에 끼친, 눈에 보이지 않는 폐해입니다. 그런 것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습니다.

서양문명의 핵심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확산을 근대화로 본

다면, 조선 말기에 비해 군국일본지배기 한반도가 근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한반도 한인의 자유를 정치적으로는 군국주의로 탄압했고, 경제적으로는 간섭주의와 사회주의로 생산성이 낮은 경제체제를 강제하였으며, 일본인에 비해 한인을 차별했기 때문에 식민지 한반도의 근대화를 오히려 방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확산할 수 있었던 데는 일제가 아니라 개화파, 서양인 선교사들과 선교회, 계몽 운동을 했던 민족주의자들과 계몽된 일부 학생들의 기여가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책의 각 부에서 제시하는 이영훈 등의 “반일종족주의”와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반론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1부 1장에서 저자는 김낙년, 허수열 등의 ‘군국일본지배기 일상에서의 거래는 대부분 자율거래였고 따라서 수탈이 많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일상에서의 거래는 자율거래, 완전한 타율거래, 자율을 가장한 타율거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래에서 거래 쌍방이 모두 자유롭다면 자율거래이고 수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거래 쌍방이 자유롭게 결정한 가격을 ‘자유시장가격’이라고 합니다. 거래 쌍방 중에 어느 일방이라도 자유롭지 못하면 그 거래는 ‘완전한 타율거래’입니다. 이런 거래에서는 수탈이나 약탈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일제가 자유시장가격보다 낮은 최고가격^{最高價格}을 정하고 일정량을 할당하여 구매한 후 일본으로 쌀을 공출해 간 것이나, 쌀 판매 대금을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강제저축하도록 한 것, 징용이나 징병 등으로 인력을 강제 동

원한 것이 대표적인 완전한 타율거래입니다. ‘자율을 가장한 타율거래’는 겉으로는 자율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율거래를 의미합니다. 군국일본지배기에 이런 거래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작업배치, 승진 등에서의 한인과 일본인 간 차별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한인과 일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을 별도로 정해 두고, 한인에게 일본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 ‘자율을 가장한 타율거래’의 예입니다. 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시장가격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을 가장한 타율거래’이고, 그로 인해 한인들이 수탈당한 것입니다. 이영훈 등은 이런 ‘자율을 가장한 타율거래’를 자율거래로 보았기 때문에 수탈이 많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저자는 이런 거래가 실제로는 타율거래였기 때문에 수탈이 만연했다고 주장합니다.

1부 2장에서는 이영훈, 김낙년, 허수열 등의 ‘일본으로의 쌀 수출에서 수탈이 없었다’라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김낙년, 허수열 등이 쌀 수출에서 수탈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계약서상의 강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의 외형만 본다면 쌀 수출은 완전한 자율거래처럼 보입니다. 저자는 세 가지 점에서 수출에서 수탈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일제의 강제가 개입된 산미증식계획과 수리조합사업을 통해 한반도에서 쌀의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이를 일본으로 수출하도록 유도하여 수탈했다는 것입니다. 일제의 수리조합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이 없었다면 실제보다 한반도 쌀의 생산이 적었을 것이고 한반도에서의 쌀 가격은 높았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일본으로의 쌀 수출량도 줄어들어 일본에서의 쌀 가격은 높았을 것입니다. 한반도 한인들은 쌀을 과잉 생산해서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았고,

일본인 소비자들은 한반도로부터 수입으로 인해 낮아진 쌀 가격만큼 이익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산미증식계획에서 영농 전 과정을 총독부가 강제했을 뿐만 아니라 수리조합사업은, 비록 일정 부분이지만, 사업 자체를 제도적으로 강제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일본 정부가 경제 정책을 통해 수행한 ‘수탈’입니다.

둘째, 미국 거래 방식에 대해 총독부가 개입함으로써 수출을 통한 수탈이 가능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내 이동과 수출입 등을 규정한 중요한 사건은 1933년에 제정된 ‘미국통제법’입니다. 그 법은 1930년에 일본이 자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반도산 미곡을 수입 금지하는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때 총독부는 쌀 가격을 자유시장가격보다 낮게 최고가격으로 고정했습니다. 1933년 이전에는 총독부가 일본인 쌀 수입상들에게 ‘담합’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쌀 수입상들이 담합하여 가격을 크게 깎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담합이 없을 때보다 가격은 훨씬 낮아졌을 것입니다.

셋째, 원화의 과대평가를 통한 수탈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원화 과대평가와 수출에 의한 수탈이 적용되는 기간은 1910~1945년입니다. 1937년 이후에는 공출에 의한 수탈과 수출에 의한 수탈이 병존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수탈이 식민지기 한반도 농민들이 가난했던 이유들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1부 3장에서는 군국일본지배기 한반도의 경제체제를 서술합니다.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간섭주의, 사회주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보호되고, 계약의 자유가 있으며, 민간이 발행하고 유통하는 건전한 화폐가 있으면 자본주의입니다. 사유재산은 보호되지만 정부에서 거래 조건을 제약하여 계약의 자유를 빼앗는다면 간섭주의이고, 사유재산까지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라고 합

니다. 건전한 화폐란 시장에서 진화한 화폐이면서 상품화폐여야 합니다. 정부에 의해 상품화폐의 진화가 멈추는 순간부터 그런 화폐는 상품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일제가 발행한 불환지폐는 건전한 화폐가 될 수 없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사가들과 일반 역사가들마저도 일본을 자본주의 국가이자 자본주의를 아시아에 확산시킨 중심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군국일본지배기 일본은 한반도에 불환지폐를 강제로 통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 하나만으로도 1910~1945년 기간 한반도 경제는 자본주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1936년까지는 강력한 간섭주의와 사회주의가 혼란된 경제체제였습니다. 이때의 간섭주의는 식민 지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일본인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로 재선 일본인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갔지만, 그 때문에 한반도 한인들의 몫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섭주의에서는 주요 재화에 대한 가격고정, 배급제, 보조금, 각종 지원 등은 필연이고 여기서 비롯하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 뇌물, 불필요한 중재거래 등이 만연하게 됩니다. 어떤 재화는 오히려 남아돌아 폐기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물질적 삶은 나빠지기만 합니다. 간섭주의가 장기간 지속되면 사회주의가 됩니다. 1930년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1937~1945년 한반도 경제체제는 전쟁 사회주의입니다. 전쟁 사회주의란 전쟁을 이유로 정부가 모든 인력과 자원을 전쟁에 동원하고 소모하면서 경제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그 시기를 군수공업화로 규정하는 것은 경제체제로서의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1937년 이후에는 조선총독부가 민간 소유의 재산마저도 잘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저축이 대표적인 예입